

전자발찌 끊으면 CCTV로 추적

대전서 첫 서비스 가동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경력자가 발찌를 훼손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추적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가동됐다. CCTV 영상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출동해 검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전시는 15일 대전스마트도시 통합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 연계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CCTV와 교통 관련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곳이다.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훼손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치추적센터는 전자발찌에 부착된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를 추적해 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었다. 보호관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는 동안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신속한 추적이

어려웠다.

앞으로 위치추적센터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다만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되는 전자발찌 훼손,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을 시작으로 올해 중 CCTV 통합관제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와 서울에 각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인기 대전시 스마트시티담당관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위치추적센터에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 단계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심리를 더 압박할 수 있어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국민일보

2019년 04월 16일 화요일 016면 사회

대전시, 전국 첫 전자발찌 부착자 CCTV 감시

훼손 등 위치추적시스템 가동

대전시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예방에 CCTV 영상을 활용한다. 시는 전자발찌 훼손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CCTV 현장 영상을 활용,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범 등 전자장치 착용자를 감시하는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는 그동안 관리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확

인할 수 없었다. 특히 관리인력 1명이 331명이나 되는 대상자를 감시해야 하는 탓에 전자발찌 훼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검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대전 전역에 설치된 CCTV 5400여대의 현장 영상이 위치추적센터로 실시간 제공될 전망이다. 만약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출입해선 안 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시 위치추적센터에 알람이 발생한다. 위치추적센터는 알람 이후 CCTV 관제를 담당하는 ‘대

전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사건발생 위치의 실시간 CCTV 영상을 요청해 현장 상황을 파악, 관할 보호관찰소에 즉시 출동 명령을 내린다. 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CCTV를 계속 모니터링해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지원한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 제공은 평시가 아닌 전자장치 훼손,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과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